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확보가 필수"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 GTX 사업 다양한 노선 필요

26일 열린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지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GTX 사업 추 진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 노선이 필 요하다는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 서 열린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 회에서 김 지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 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 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 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 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 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7606 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 비 1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 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원 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 화폐 발행액 4조7606억원의 4%에 해 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 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

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 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 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 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난 7 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 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 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 · E · F노 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 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 경 · 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 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 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밖에 △분권교부세 보전 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 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 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 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 행 1904억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 액보육료 지원 1043억원 △경기도 농 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원 △노인일자 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원 △주 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 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 비 925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창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위기학생 지원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야생조류 보 호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 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 천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 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 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 생을 적기에 발굴ㆍ지원해 심리적 위 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 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 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 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은 '인역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경 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 점유 자 · 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 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신충식 위원장은 "야생조류는 투명 유리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부딪혀 죽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 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 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안종삼 기자



'윤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여야 '충돌'

국민의힘 "MBC 왜곡 보도" 민주당 "언론 탄압만 열중"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한 MBC가 "왜곡 보도했 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노골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 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는 언론의 기본이고 윤리다"라며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 차원 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방 위 간사와 논의해 MBC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 밝히고 "핵심적 내용이 확인되 지 않았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 진 장관이 잘 협조해서 국회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전후맥락 비추어보면 MBC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하고 의도 적이고 악의적으로 했을 가능성 높다" 고 주장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초의 보 도다. 최초의 보도일수록 확인 절차 거 쳐야 하는데, 더구나 한미동맹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안보에 영향 미칠 수 있 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확실 히 틀렸다고 단정하진 않지만 보도의 기본을 안 지켰다. 전문가조차 의견 갈 리는데 너무 단정적 보도를 했다"고 못 박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에 서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 민 위협에 빠트리면 안된다"며 "그 외 관

련 진상 등은 더 확실하려 갈려져야 한 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고민정 더불어민주 당 비상대책위원은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이 노골적인 행태들은 갈수 록 더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욕설 발언 과 관련해서 'MBC가 왜곡했다'라고 권 성동 의원이 얘기하더니, 대통령도 '사 실과 다른 보도'라고 하면서 결국은 또 MBC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고민정 위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의 추출은 말할 것도 없다"며 "방송통신 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학자와 시민단 체 전문가들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종 편 재승인 심사 활동에까지 강제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전용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 서실장은 긴급 입장문으로 "윤석열 대

통령과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주장, 무 엇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며 "윤 대 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사과했 어야 함에도 그저 가짜뉴스로 몰아가기 에 바빴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전용기 비서실장은 "지난 22 일 오전 보도가 나기전에 대통령의 욕 설 영상과 내용이 온라인상에 돌았던 건 대부분의 기자와 대통령실 대변인단 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보도가 문제 인가? 거친 언사를 한 대통령이 문제인 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 경과까지 왜곡 하며 대통령을 무턱대고 비호하는 국민 의힘은 매우 유감스럽다. 본말이 뒤집 힌 황당한 '지록위마'디"라며 "욕설 파문 진상 조사는 위장한 언론 탄압으로 규 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정윤 기자

"1개 지역 1개 교육청 설치 논의 찬성"

송옥주 의원 입장 밝혀 "화성·오산 교육청 분리"

송옥주(민주당, 화성갑·사진) 국 회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개 시 · 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 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 · 군이 있 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뿐이다. 화 성 · 오산, 광주 · 하남, 군포 · 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 양주는 한데 묶여 교육지원청이 1개 씩만 운영돼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 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도의회 국민 의힘 소속의원은 도교육청이 도의회 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 청 분리를 위한 실무 TF를 꾸려야 한 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성은 최근 신도시 개발 및



수많은 택지지 구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 격히 증가하면 서 교육행정 효 율화를 위해 통 합교육지원청의

분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송 의원은 이러한 화성 주민들의 고 충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총선에서 화성 · 오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기도교육청에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교 육부에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시행 령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송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1개 지역 에 1개 교육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 장에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화성과 경기도 주민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적극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여의도 소식

송양유치원 학부모와 현안 간담회

"피해자 보호가 처벌강화보다 시급"

김남국 의원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 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남국(민주당, 안 산단원을 · 사진) 국회의원이 스토킹 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 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 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소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 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 도, 강제집행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 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2차 피 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다. 개인정보 노출 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들 은 범죄로 인한 손 해배상 청구에 쉽

게 나서지 못하

고 있다. 실제, n번방 범죄자인 조주빈 의 피해자 25명 중 범죄피해 손해배상 을 청구한 피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한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뀐 주소, 바뀐 이름이 다시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 난 2020년에는 유명 걸그룹 멤버가 악 플러 상대 소송 중 집주소가 노출돼 2차 피해 우려로 이사를 하게 된 사례도 있

김민철 의원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 사진) 국회 의원은 송산3동 송양유치원 학부모 비 상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갖 고, 송양유치원 옆에 건설 예정인 지식 산업센터가 유치원 유아 및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적 극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21일 오후 김 의원은 송양유치원에서 송양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송산3동에 위치한 송양유치원 옆 에 건설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아이들 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2019년에 송산3동 송양유치원 인근에 김대영 기자 건립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됐다가



중단됐는데, 2022 년에 왜 갑자기 추 진되고 있는지, 사 업 추진을 진행하 면서 송산3동 송양 유치원 학부모, 인 근 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송양유치원 학부모와 송산3동 주민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송양유치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건설될 경우 "유아들의 건강 및 학습권 침해, 공 사 차량으로 발생 되는 유해 물질에 대 해 유아들의 건강 위협, 통학도로 혼잡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주영 의원

한국투자공사(KIC)가 1700억원 규모 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 주당, 김포시갑 · **사진**) 국회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 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이플 타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상감 사를 누락했다.

메이플타워는 케이리얼티 제6호 위 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리츠(부동 산투자회사, REITs)가 보유한 자산으 로, 한국투자공사는 지분의 40%를 소 유한 최대주주다. 이 밖에 경찰공제회 조영욱 기자 37.5.%, KT에스테이트가 17.50%의



한국투자공사, 일상감사 없이 부동산 처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4년부터 메이 플타워를 리츠회사 를 통해 부동산 간 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2021년 운영만기에 따 라 매각을 진행했다. 총 1700억원(평당 3700만원)에 KT estate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는 투자원 금(160억원) 및 미배당금(17억원), 약 113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어 총 300억원 수익을 냈다. 이는 창사 이래 최초 및 최 대의 수익성 자산 처분거래이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이 같은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 는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 박성삼 기자